

# ‘산업 기동대’ 2분기 710회 소통 지방·산단 등 현장애로 17건 해소

#1. 산업단지애로 입주해 있는 A기업은 여름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산업단지공단 합동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 내년 국내 최초로 8인치 전력 반도체 양산을 계획 중인 B기업은 실증(신뢰성 등)을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애로 전력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제품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기동대)’ 운영을 통해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규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기능별로는 간담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월부터 현장방문 실시 애로해소·정책과제 발굴 추진 재정·세제 30건 등 82건 발굴 “기업과 소통, 불합리 규제 혁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를 진행하며 산업계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 사항은 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 등 총 82건이다.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 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틸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청정수소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더 열심히 뚫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국립환경과학원

### 폐기물 에너지화 박차

SK에코플랜트와 연구 협력 체결 AI 소각로 등 신기술 운영 기법 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4일 SK에코플랜트와 폐자원 에너지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3일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폐자원 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소각로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시설 운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핵심기술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로 폐자원 에너지 연구 분야의 최신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인적 자원 교류 협력 ▲탄소중립 이행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실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가진 연구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폐기물 에너지화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마세요”

고용부,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 구축 협업 인재채움뱅크 통해 대체인력 지원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이 진행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지 내에서 적극적인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기관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4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계하고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 모든 산업단지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단지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자치단체·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 체코 신규원전사업 계약 위해 총력 대응

한수원, 최종 계약 협상대응TF 발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3월 예정인 체코 신규원전건설 최종 계약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23일 체코 신규원전사업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협상대응 TF를 지난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계약협상 절차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TF는 총괄, 설계, 사업 및 공사 등 각 분야별 한수원과 협력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협상대응 TF는 체코 발주사(EDU II)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신속하고 꼼꼼한 계약체결을 위해 협상의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앞서 한수원은 계약체결 이후를 대비한 ‘체코건설준비센터’를 지난 18일 신설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체코건설준비센터는 계약 즉시 착수해야 할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사전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계약체결 이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협상대응 TF 실무진들은 이른 시일 내 체코 발주사와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해 계약협상 일정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체코 발주사와 세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2025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개·고양이 11만 마리 버려졌다

농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실태조사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반려동물 수가 11만 마리에 달했다. 구조된 11만 3000마리 중 2만 마리(18%)는 안락사 처리됐다. 작년 기준 누적으로, 반려견·반려묘의 등록 개체수는 328만 6000마리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등이 담겼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최근 3년째 11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엔 11만 3100마리가 유실·유기동물로 발견돼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에 비해 0.3% 줄어 들었다.

지난해 지역별 유실·유기동물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은 588마리가 구조됐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34.2%에 달한다. 이어 충북 4562마리(8.3%), 충남 8742마리(8.2%), 서울 5175마리(6.4%), 대구 4555마리(5.4%), 전북 9084마리(3.5%), 전남 9703마리(3.4%)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구조된 반려동물 중 4만 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다. 또 3만 1000마리(27.6%)는 자연사했고, 2만 마리(18.0%)는 안락사 처리됐다. 1만 5000마리(13.3%)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다.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도 305만 4000마리 대비 7.6% 늘어난 328만 6000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27만 1000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

개는 지난해 25만 7989마리가 등록됐다. 등록마리수로 놓고 보면 전년대비 3만 2969마리(-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는 전년 1만 1639마리보다 1545마리 증가한 1만 3184마리가 새롭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의 경우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지난해 외장형 신규 등록은 13만 2000마리,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신규 등록은 12만 5000마리로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 추석 성수기, 도매업자 한우 구매한도 상향

농식품부, 한우 수급동향 점검

정부가 한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도매업자 등의 구매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3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오는 추석 성수기에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또 적정가격 매입과 분산, 도·소매 가격 연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공판장 경매사 등과 만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절한 한우가격의 평

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통한 가격 선도기능 활성화를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